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인 활동 발목, 낡은규제 혁신 처벌중심의 조항 대대적 손볼 것”

李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것들을 이번엔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산업·민생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으로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주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평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는,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다. 또 정부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르다”면서 “규제들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이런 걸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성장 막는 규제 논의
산재시 엄청난 과징금 때리고 기업인 투자 제한 배임죄 개선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게 목표

이러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배임죄 등 처벌 조항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보통 우리는 처벌

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지 않나”라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아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니 최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기업들한테 그걸 훨씬 더 (타격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배임죄를 두고는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런다.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한국은 기업인)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하고 배임죄로 기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협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현대건설, 이라크서 4조 해수플랜트 공사 수주

가스개발 통합 프로젝트 일환 진행 이라크 국가재정 확충 기여 클 듯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원 규모의 해수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이라크 총리실에서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공급 시설(WIP·Water Infrastructure Project)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플랜트 공사는 이라크 내 ▲가스 ▲석유 ▲태양광 ▲해수 처리 등 가스 개발 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대건설이 수행하는 WIP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위치한 웨스트 쿠르나,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사용된다.

플랜트 공사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하는 사업형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권인 이라크는 국가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WIP는 2030년까지

현재 하루 420만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800만배럴까지 증산하기 위한 이라크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이라크 내 원유 생산량 증가는 물론 국가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전쟁과 코로나19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오랜 기간 책임감 있게 주요한 국책 공사를 수행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한 현대건설에 대한 굳건한 신뢰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에도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될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jiw13@

소상공인에 명절자금 43조 2차 소비쿠폰 10만원 지급

>> 1면 ‘지역사랑상품권 최대...’서 계속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며 “당은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 사랑 상품권의 정책 효과가 소상공인까지 고루 닿도록 살피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페이백이나 특별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자금은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저희는 세가지 대책을 준비했다. 첫째, 9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5~10%에서 7~20%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으로 43조2000억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내용

- 성수품물가안정**
 - 성수품 최대 17.2만톤 공급(평시의 1.6배 규모)
 - 농산물 2.6배, 축산물 1.3배, 수산물 2배 등
 - 성수품 할인 지원 예산 900억원 편성
 - 선물세트 등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 쌀 수급 안정
 - 정부양곡 5.5만톤 공급
- 지방중심내수활성화**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시행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할인율 증가
 - 숙박시설 할인쿠폰 15만장 발행
 - 7만원 이상→5만원, 7만원 미만→3만원 할인
 -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연휴기간 문화·휴양시설 무료개방
- 민생부담경감**
 - 43.2조원 규모 대출·보증 공급
 - 61조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연장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정책금융 1445억원 공급
 - 햇살론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지원
 - 중소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 납부유예
- 국민안전**
 - 교통·의료 등 24시간 안전관리체계 가동
 -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자료/정부 그래픽/정민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적 열망 고려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
추석기간 24시 안전관리 체제 가동
6주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그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9월 셋째주부터 10월 2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며 “성수품 물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가지 요금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안전 관리 체제를 가동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도 185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내수 경기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욱 진작될 수 있도록 농식품 물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t)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명절 전 6주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용자 이자를 1%로 낮추고 용자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간추진으로 인한 경제 활동 제한 등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에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을 개시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자금 제도를 개선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돕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전시, 영화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쿠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인 다음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고속열차 운임도 30~40% 할인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